

【서면답변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미래먹거리 창출 촉구 관련 질의-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0. 10. 14.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질문요지

1. 첨단의료산업 정책과 투자 집중을 위한 대구와 오송과의 공동 전략 모색 및 정책적으로 연대한 노력
2. IT기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산업과 의료산업과의 연계 방안
3. 코로나19로 의료분야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적 활용 계획

[답 변]

- 평소 지역 의료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미래먹거리 창출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첨단의료산업 정책과 투자 집중을 위한 대구와 오송과의 공동 전략 모색 및 정책적으로 연대한 노력

- 2009년 9월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와 충북 오송에 각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2010년 12월 침복단지를 운영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 2013년 11월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여 본격 운영중임.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 의료산업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적 대안 창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 현재 대구와 오송 이외에 판교, 송도, 원주, 나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자체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투자 등으로 의약 및 의료기기 기업체의 집적을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우리시는 비수도권이라는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오송 침복재단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정부정책 반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기업 유치와 R&D예산을 확보 등을 통해 침복단지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
- 먼저,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으로는 ‘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토지분양·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자체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침복단지 입주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 침복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 생산시설(바닥면적 합계 3,000㎡ 이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 연계를 통해 기업에게는 경영안정을,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음.
  - 이 외에도, 침복단지 입주관리 규정 우선 적용 명시, 부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 신설, 단지 내 판매시설 설치규정 신설 등 침복단지 입주기업의 민원 해결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오송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둘째, 침복단지내 핵심 인프라 시설인 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그 추진체계, 소요예산 확보 등의 난제로 몇 년에 걸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대구침복재단과 오송침복재단이 협력하여

복지부·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로 2015년말 국회에서 설계비 반영을 시작으로 두 지역에 동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두 지역 모두 금년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2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되는 신약·의료기기에 대해 전임상에서 임상에 이르는 빠르고 저렴한 전주기 임상시험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지원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첨단임상시험센터(대구/오송) >

- 사업기간 : 2016 ~ 2022년(7년)
- 규 모
  - (대구) 부지 15,713m<sup>2</sup>, 연면적 6,465m<sup>2</sup>(지하 1층, 지상 4층)
  - (오송) 부지 14,545m<sup>2</sup>, 연면적 6,513m<sup>2</sup>(지하 1층, 지상 3층)
    - \* 진료센터(60병상), 검사실, 분석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약국 등
- 소요예산 : 763.5억원
  - (대구) 416.9억원(주공사비 200.1 장비비 100 보상비 93.8 시설부대비 23)
  - (오송) 346.6억원(주공사비 200.5, 장비비 100, 보상비 23, 시설부대비 23.1)

- 셋째, 기술장벽이 높은 고도의 신약 및 의료기기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첨복단지 내 고부가가치 동물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시설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와 양 재단이 협력, 정부에 적극 건의 하여 2020년 오송에 첨단모델평가동 구축사업('20~'23년)에 국비가 반영되어 추진중이며, 대구에는 2021년 정부예산에 미래의료기술 연구동 구축사업('21~'24년)이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임.

< 동물실험시설 구축(대구/오송) >

<p>○ (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사업</li> <li>- 사업기간 : 2021~2024년</li> <li>- 사업비 : 156억원</li> <li>※ 실험동물 : 미니피그</li> </ul>	<p>○ (오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첨단모델평가동 구축사업</li> <li>- 사업기간 : 2020~2023년</li> <li>- 사업비 : 155억원</li> <li>※ 실험동물 : 마모셋원숭이 등</li> </ul>
---	---

- 넷째, 침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총 6,500억원 규모의 ‘국가 첨단의료기반 연구개발사업’(‘22~’31년)을 범부처 사업으로 오송침복재단과 현재 공동 기획하고 있음.
- 우리시는 침복단지과 의료R&D특구에 지난해까지 144개사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 중 13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음. 입주 완료한 기업의 고용인원은 2015년 1,041명에서 지난해 2,719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했고, 매출액은 2014년 1,795억원에서 지난해 3,385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
- 앞으로도 대구는 오송, 양 침복재단과 정책적으로 협력하여 정부 국책사업, R&D지원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음. 이와 함께 첨단 의료기업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겠으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발굴 및 의료관련 벤처기업 창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대구를 세계적인 의료산업 및 의료 R&D허브로 만들겠음.

## 2. IT기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산업과 의료산업과의 연계 방안

-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치료 중심에서 의료소비자·개인화된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 3.0시대에는 로봇, AI, 바이오분야 등의 기초 연구성과를 활용한 융합형 의료기기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융합형 의료기기 중점분야 발굴 및 전주기 지원을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이중 로봇분야는 대구의 풍부한 인프라와 기반산업을 통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대구에는 로봇분야 국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봇기업('18년, 188개사)이 있음. 특히, ABB, 야스카와전기, 쿠카, 스토브리 등 글로벌 로봇기업이 입지하고 있음.

< 대구 로봇산업 현황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10.6월),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완료('17.6월 준공)
- 로봇산업의 양적 팽창 : 로봇기업 수·매출액·고용은 비수도권 1위
  - 기업수 : 2010년 23개사 → 2014년 48개사 → 2018년 188개사
  - 매출액 : 2010년 1,775억원 → 2014년 1,942억원 → 2018년 7,021억원
  - 고용 : 2010년 773명 → 2014년 1,098명 → 2018년 2,463명
- 글로벌 로봇기업 5개사 입지 : 현대로보틱스, ABB, 야스카와전기, 쿠카, 스토브리

- 세계 의료로봇 시장규모는 2017년 22억 달러에서 2022년 91억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될 전망이며, 이중 수술로봇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함(출처: IFR(국제로봇연맹)). 대표적인 수술로봇인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독점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로봇 다빈치(da Vinci)는 2000년도에 FDA허가를 받고, 현재 전세계에 약 5,000대, 국내에 약 90대 이상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정부는 대구첨복단지에 합성신약과 IT(정보통신기술)기반 첨단의료기기 중심으로, 오송첨복단지에 바이오신약과 BT(생명공학기술)기반 첨단의료기기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첨복재단은 IT기반 의료기술을 로봇과 연계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시는 첨복재단 뿐만 아니라 경북대, DGIST(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등과 의료로봇 분야의 정부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 (경북대) 산업부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사업'('18~'22년)
    - 과제명 : 혈관성 뼈 질환의 정밀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기술과 최소침습형 수술 로봇
  - \* (DGIST) 산업부 '마이크로 의료로봇 시스템 개발사업'('15~'19년)
    - 과제명 :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 시스템 개발
- 지역의 의료로봇분야 기업역량은 부족한 현실이나, 의료·로봇 두 분야 모두에 지역의 강점이 있는 만큼, 의료로봇 시장의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대학·병원·첨복재단을 비롯한 지역소재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 의원님의 말씀처럼, IT기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과 의료산업을 연계하여 정부 국책사업 선정과 성과 창출 등으로 우리시가 의료로봇 메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3. 코로나19로 의료분야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적 활용 계획

- 코로나19의 발생(확산)·대응 과정에서 방역 및 조기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21년 예산안에 '사전예방-진단-치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을 위하여 1.8조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대구시는 감염병 대응 체계의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속에 6시간 이상 소요된 진단시간을 20분으로 대폭 줄인 진단키트 2종을 개발한 기업(M사)을 첨복재단에서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키트 개발에 성공한 기업(I사)도 첨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임.
- 국가주도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인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첨복재단은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개발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 \* 진단 :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 지원 (M사) 및 신속진단법 고도화 추진중
- 환자관리 : ICT 기반 환자원격 모니터링 지원(코로나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치료제 : 감염병 치료 선도물질 발굴 시스템 구축중
- 치료제 생산 : 코로나19 치료 임상용 의약품 생산 추진중

\*\*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 유사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진단-치료-관리) 체계

- 우리시는 현안사업인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감염병 등 진단 관련 전문기업을 침복단지 내에 유치하고, 침복재단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 입증된 진단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진단분야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정부 R&D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침복단지 내 건립 추진중인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동), 뇌연구실용화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의료산업 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속한 전주기 기업지원(R&D→전임상→임상→인허가→생산→마케팅)을 완성함으로써 입주기업과 공동 연구개발로 상품화 촉진, 매출 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내겠음.
- 우리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업, 사업화 지원 기능 등의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가속화하고, 맞춤형 의료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추진하겠음.



- 수소산업 육성 촉구 관련 질의 -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0. 10. 14.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답 변]

□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확대관련 대구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2019년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지역의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19년 5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2019.5)

(단위 : 대, 개소/기)

구 분	누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30년까지
수소차	12,000	- (5)	96 (100)	300 (400)	600 (1,000)	11,000 (12,000)
수소충전소	40	1 (1)	1 (2)	1 (3)	1 (4)	36 (40)

※ 주요 대도시 수소차 등록 현황('20.8월)

구분	대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댓수	54	1,152	798	397	614	1,628	399

○ 우리시의 수소충전소 구축방향은 시민수용성과 안전성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음.

- 2019년 대구지역 1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 8월 성서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현재 상업 운전 중에 있음(설치 : 수소에너지네트웍(주), 운영 : 대성에너지(주)).
- 2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북구 관음동 지역에 구축을 목표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설치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우리시와 협력하여 동구 혁신도시내에 2021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 1기를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달성군 지역에 위치한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내 구축된 V2X 테스트베드 연구실증용 수소충전소는 2021년 하반기에 시설보강 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될 계획임.

※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

구 분	달서구 성서충전소	북구 관음충전소	동구 한국가스공사
사업기간	'19.12 ~ '20.8 (현재 상업운전 중)	'20.4 ~ '21.11	'20.5 ~ '21.6
사업비	30억원(민자)	65.4억원(국42,시23.4)	33억원(공사 자체예산)
실 충전대수(일)	승용차 400대 또는 버스 10대	승용차 1,000대 또는 버스 26대	승용차 400대 또는 버스 10대

- 지역의 수소충전소는 계획대로 2022년까지 4개소가 구축 운영 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 1기당 약 400여대의 수소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에는 많은 비용 등이 요구되어 2022년 이후에는 수소전기차의 보급 추이와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음.

- 앞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수소를 자체 생산하여 운영하는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방식(자체 생산 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됨
    - 저장식(Off-site)방식 :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파이프라인, 튜브트레일러 등으로 수소 공급
    - 제조식(On-site)방식 : 충전소 내에서 추출(개질), 수전해 등을 통해 수소 생산 공급
  
-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와 수소가격 하락 등으로 수소경제가 활성화 되면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자본이 적극 투자되어 수소충전소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됨.

2. 한국가스공사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밝혀주시고, 대구시의 사업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는 지역상생, 에너지 산업발전을 목표로 지역기업·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상생플랫폼 조성하고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K-R&D캠퍼스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당초 ‘수소콤플렉스 구축사업’으로 기획되었는데, 우리 시와 가스공사가 지난 3월, 합동 TF를 구성하여 의논한 결과 전국 공모사업에서 대구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명과 콘셉트도 변경하였음.
- 기존 수소연구센터, 수소유통센터 등의 분야는 유지하면서 혁신 도시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협력관을 구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연계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진행할 것임.
- 우리 시는 의료연구용으로 제한된 첩복단지를 본 사업 조성을 위해 복지부와 일부 지정해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용도제한 해제된 부지에 K-R&D캠퍼스가 건립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사항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임.

※ K-R&D 캠퍼스 구축사업 개요

- 기간/사업비 : 2020 ~ 2023년 / 약 900억원
- 부지 :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동구 신서동 1142, 27,113.6㎡)
- 구성 : 상생협력관, 연구센터, 홍보·체험관, 신성장비즈니스관, 테크니컬센터

- 기대효과 : 2030년 까지 3,6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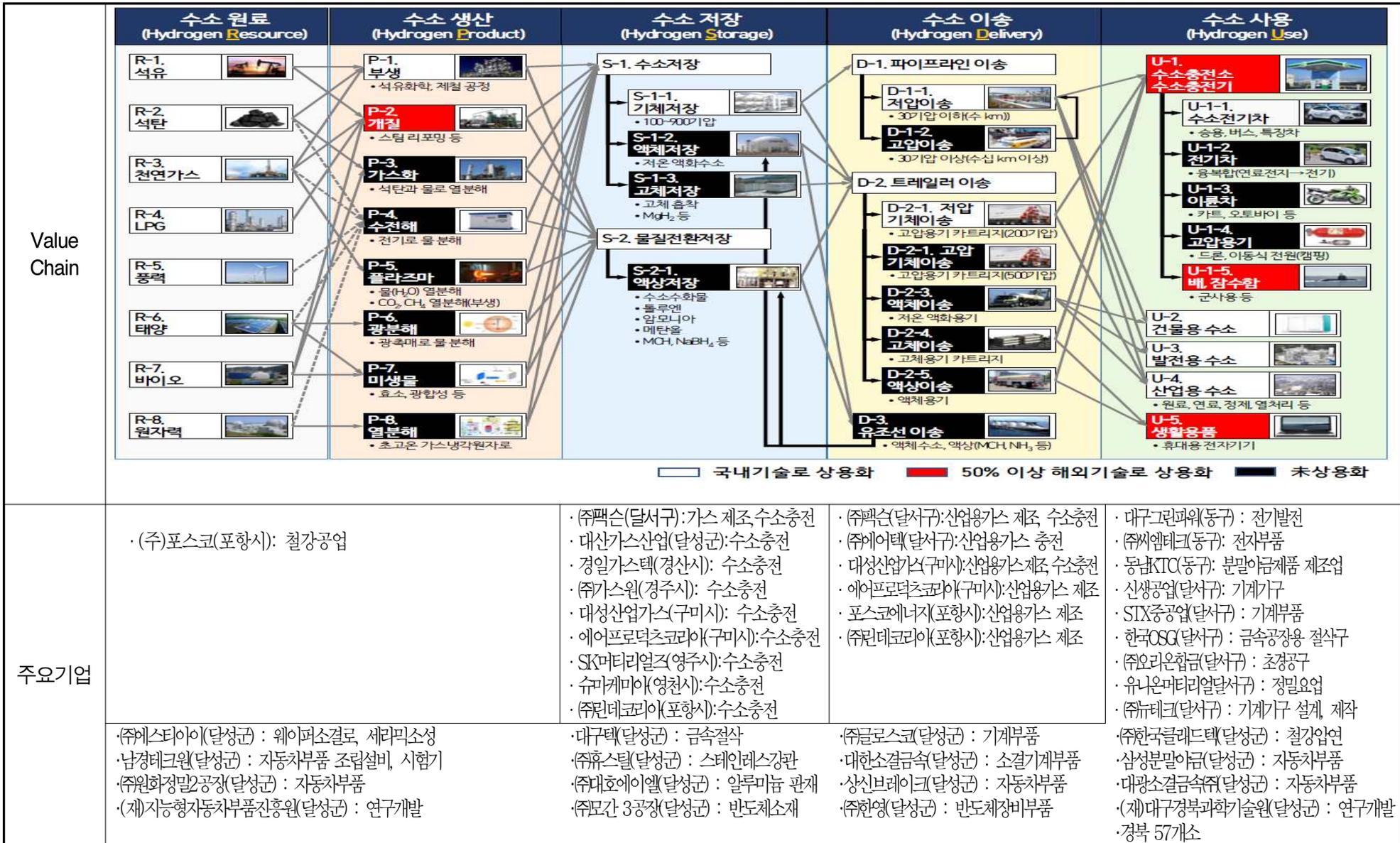
**3. 대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수소차 부품육성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6년부터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도 까지 전기·자율차 분야에 19개 기업(20개 과제, 128억원)을 지원하였음
- '20년부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자율차 및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하여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 과제 내외로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 200억 = 4억(과제당) × 10(과제수) × 5년
- 1단계인 '20년도에 신규과제로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4개 과제(수소차 1, 전기차 2, 자율차 1)를 선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이 전기·자율차 산업과 함께 수소차 부품 산업으로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음
  - ※ '20년도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선정 현황 -

NO	분 야	과 제 명	주관기업	총 사업기간	지원금 (백만원)
1	수소차	중대형 수소차 스택 적층 효율화를 위한 분리판 접합 모듈 개발	평화오일셀공업(주)	'20.8.~'22.7.(2년)	400
2	전기차	Torque Vectoring 기능을 포함한 전기자동차용 e-Axle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	이래AMS(주)	'20.8.~'22.7.(2년)	400
3	전기차	xEV용 50kW급 비출력 향상을 위한 구동시스템 개발	주고이정공	'20.8.~'22.7.(2년)	400
4	자율차	멀티영상신호 통합처리 및 편의제어를 위한 AGL 기반 통합콕핏 시스템 개발	주드람에이스	'20.8.~'22.7.(2년)	400

※ 평화오일셀공업(주) : 넥쏘(수소차) 연료전지용 가스켓 납품('20년 매출 514억원 예상)

■ 대구 경북지역 수소관련 기자재 주요기업 현황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관련 -  
**서 면 질 문 답 변 서**

2020. 11. 13.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관광과)

-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장애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이시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180억 예산 증액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바람.

- 2016년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추진시 2017~2019년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40억원(국비70, 시비 70)을 투입하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코자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실시설계 추진중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 안전성 등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설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동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문화재현상변경, 공원계획변경, 조달청 원가검토 등
- 이로인해 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사항 등 관련행정절차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반영 후 최종 설계완료시 2016년 대비 사업비가 약 40억원정도 증액 되었음
- 팔공산은 대구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중요 관광지 중 하나이나, 현재 팔공산 일대 관광객 유입율이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임  
(팔공산권 관광객 유입률 '04년 58.6%→'10년 14% →'17년 12.1% → '18년 12.0%→'19년 9.6%)  
이와관련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나 팔공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교통약자들에게도 팔공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인근 동화사, 갯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팔공산의 인지도 확산 및 침체된 팔공산권 상권과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도 도심보다 야외로 몰리고 있으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대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팔공산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팔공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팔공산 구름다리 40억 예산증액의 정확한 산출근거와 이유를 답변바람.**

- 2016년 팔공산구름다리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시 사업비 산출은 기 설치된 유사사례를 적용, 2017~2019년 3개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140억원으로 검토되어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실시설계 추진중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안전성 등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설계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동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된(20.1월) 도서를 바탕으로 대구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경제성검토(VE) 및 건설기술심의, 「대구시 신기술 플랫폼 운영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 심의, 「대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한 계약심사, 「대구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한 일상감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실시설계완료(20.10월) 하였음
-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설계 완료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비 40억원 증액되었음

## ○ 사업비가 증액된 주된 사유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을 보면 당초 계획대비 건설공사비지수가 약15% 이상 인상됨에 따라 약21억원 증액,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자연 증가되는 설계 및 감리 용역비 약5억원 증액(설계 및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기타 보상비, 가설삭도, 헬기운반 비용 등 기타비용 약14억원 증액 되었음

건설공사비지수(2015년=100)		'16.10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토목건설		103.06	118.71	118.41	118.43	118.61	118.58	118.70	120.58
	교통시설건설	102.82	117.53	117.05	117.07	117.34	117.20	117.35	119.11
	도로시설	102.43	117.44	116.89	116.87	117.19	117.06	117.26	118.99
	철도시설	103.29	117.47	117.16	117.22	117.41	117.25	117.37	119.17
	항만시설	104.64	118.69	118.11	118.30	118.46	118.20	118.14	119.97

※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임

※ 개발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물가변동 분석을 위한 기준 제공

- 기존에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가변동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들 지수는 편제품목이나 가중치 구조가 건설산업의 특성과 상이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물가변동분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건설에 특화된 물가지수를 제공

※ 활용목적 : 기존 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위한 기초자료

## ○ 그러나 설계완료시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나 입찰(87%정도) 후 공사 가능 금액은 기본계획대비 물가상승분정도가 포함된 150억원정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구시의 발표대로 12월에 착공한다면 시기가 압박했다는 것인데 협약 체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 대구시와 (주)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 (주)팔공산케이블카의 사회환원 예산은 얼마이며 몇 년간 환원하는 것인지?

- 협상내용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이 주내용이며, 이에 더해 사회공헌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
- 케이블카와의 협상은 공사 착수 전 협상을 완료 할 예정이며, 현재 케이블카측에 사회공헌분야를 포함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등에 대해 협상안을 요청한 상황임

-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토지소유주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토지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며 12월 착공 전 협의 일정은 언제 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팔공산 구름다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자(토지소유주)들과 보상협의 추진함
  - 법률에 따라 본 사업의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구청에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이해관계자(토지소유주)들에게 통지(공고문 및 관련서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20.11.9 ~ '20.11.23)
- 토지보상은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협의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 절차로 추진되므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단정 할 수 없으나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충분히 가질 계획임

- 2016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갑작스런 감리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며 구름다리 조성에 시민 단체들의 반대의 의견이 높은 시기를 고려하여 용역공고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 예산은 현재까지 510백만원 집행하였으며, 팔공산구름다리 설치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본 공사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장대보도교량을 설치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에 의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공정관리 실태 확인과 사전 설계도서 검토 등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후 낙찰사를 선정, 11월 말 경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 공사착공 전 9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코로나 19의 대구를 외면하고 “관광자원간 시너지효과 및 교통약자 편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답변바람

-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는 지속적으로 협의 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단체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팔공산의 관광행태는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거나, 단순한 등산, 휴식을 하거나, 불교사찰인 동화사, 파계사, 그리고 소원성취 기도를 드리는 갯바위 중심의 단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사계절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팔공산에 케이블카와 연계한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

1) 여름 비수기를 극복하고, 2) 외래관광객이 짧은 시간에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3) 액티비티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색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함

-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익창출이 기대되고, 보행약자들의 산악관광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
- 하지만 산악관광 인프라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들에게 “보편적 산악관광”의 실현수단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토야마, 중국 황산, 스위스 알프산 등 해외 유명 산악관광지를 보면 알 수가 있으며, 스위스 오이로파브뤼케 출렁다리, 중국 장가계 구름다리, 오스트리아 로이테 출렁다리, 독일 하르츠산 출렁다리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산악관광 명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의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후에 훼손되었던 등산로는 이용이 전무하여 완전 자연식생으로 복원된 사례도 있음
- 현재 전국의 명산들이 밀려드는 등산객들로 새로운 등산로가 계속 생기는 등 각종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카, 출렁다리, 산악열차 등 산악 인프라가 등산객의 이동을 통제, 산림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 최근 산(山)도 디지털시대에 맞춰 급변하고 있음. 과거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 즉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연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같이 구름다리설치사업은 팔공산 관광활성화의 첫발걸음으로서 향후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인근 동화사, 갯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불교문화와 역사문화를 연계,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여 팔공산의 인지도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관광과 연계하여 대구 외곽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미래형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정비산업 관련 정책적 관심 촉구 관련 질의-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0. 12. 1.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 질문요지

1.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대출연장 등의 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들에 있어서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정책방안
2.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하므로 대구시 자동차 부품산업 역량강화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및 기대성과
3.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파생산업들 또한 자동차 생태계의 큰 변화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들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래형 자동차 보급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비업 및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은 더 영세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 또한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향후 미래형자동차 전문 수리관련 업종변환, 투자지원, 기능교육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필요

### [답 변]

- 평소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형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정비산업 관련 대응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대출연장 등의 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들에 있어서 위기의 안전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정책방안

-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자금조달 애로가 5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정책수요로는 운영 자금 공급이 48.8%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므로,
  - (P-CBO)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으며,
    - \* (성과) 총11개사 440억원 지원 / ('19년) 9개사, 330억원 ('20년) 2개사, 110억원
  - (지역밀착형상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 3차 협력 부품기업 신용등급 CCC이상 보증지원 추진하고,
    - \* (성과) 65개사 171억원 지원 \* ('19년) 19개사, 56억원 ('20년) 46개사, 115억원
  - (상생특별보증) 을 6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20개사 601억원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유동성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또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극복을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 신규고용 인력 인건비 지원 300명(최대 2년간 지원)
    - \* ('19년) 94개사 300명 / 지원금액 44억원(국26, 시18, 민9 별도)
    - \* ('20년) 67개사 300명 / 지원금액 58억원(국36, 시22, 민14 별도)
  - (지원방법) 기업에서 인건비(1인당 2백만원) 지급 후 지원금 청구
  
- 이외에도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비R&D지원사업인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시제품 제작지원, 성능시험평가지원, 마케팅 지원 등 97개사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60개사 추가 지원할 계획임
  
- 향후에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음

2.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자동차 부품산업 역량강화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및 기대성과

- 대구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市 자체사업으로 '16년부터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년도 까지 전기·자율차 분야에 24개 기업(24개 과제, 1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 과제 내외로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올해부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자율차 및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함 \* 200억 = 4억(과제당) × 10(과제수) × 5년
- 또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연기관 중심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구조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6건, 873억원)
  - (R&D) 전기자율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사업('18~'21년, 178억원)으로 이 래AMS(주)등 14개 기업(14개 과제)을 지원하고 있으며,
  - (비R&D)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 구축사업('20~'23년, 158억원),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사업('20~'22년, 95억원), 등을 통해 실증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역 자동차기업들이 미래차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3. 미래형 자동차 보급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비업 및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은 더 영세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 또한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형자동차 전문 수리관련 업종변환, 투자지원, 기능교육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필요

- 내연기관 자동차와 미래차(전기차·수소차 등)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차 정비를 위해서는 통신, 제어 등 미래차 정비관련 기술습득이 요구됨
- 이에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대상의 '미래차 정비기술 교육강좌'를 내년부터 계명대학교 HuStar 혁신대학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임
  - 2021년 1학기에는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장소 제약없이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 관련 기초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에는 정비업 종사자의 생업을 고려하여 실습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교육용 AR/VR 콘텐츠 제작 준비 중임
- 또한, 산업부에서도 자동차정비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 4개소를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5년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에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대응하겠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계획 및 방향성 질의 -

#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0. 12. 9.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질문요지

1. 행정통합 공론화 방법과 과정, 주민투표 시기, 이후 행정절차, 통합관련 법률안 제정 등 남은 절차
2.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 기간동안 대구경북 각자의 중기예산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기계획과 시책사업들, 자치법규와 위원회 등 관련 사무 조정계획
3. 행정통합 관련 신청사 사업에 대한 대구시 입장
4. 행정통합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 완료시기 조정에 대한 생각
5.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각 지자체장 정치적 행보 오해를 미연 방지 및 정책추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자치단체장 불출마 선언 필요

[답 변]

- 평소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질문하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계획 및 방향성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행정통합 공론화 방법과 과정, 주민투표 시기, 이후 행정절차, 통합관련 법률안 제정 등 남은 절차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안) 준비, 공론화,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태일, 하혜수 교수) 출범 : '20. 9월  
- 역할 :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주민투표 시기 결정, 특별법 제정 지원 등

○ 지난 12월 9일에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음.

\* 제20회 대구시민원탁회의 : '20. 12. 9.(수) 19시

- 토론의제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  
- 개최방식 : 비대면 화상토론(Zoom 프로그램 이용)

- (1토론) 행정통합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에 대한 포괄적 논의
  - (2토론) 대구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 서로에게 보내는 당부의 메시지 작성
- ※ 시민들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점을 포괄적으로 수합, 우려에 대응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 제시 및 공론화 요구

○ 향후 의견수렴 3회, 대토론회 1회, 여론조사 2회 등 시도민 공론화를 실시하여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도민들이 스스로 행정통합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의견수렴 이후 행정통합의 절차적 단계는 다음과 같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됨.

- 내년 6월쯤 시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고, 시도민이 찬성하면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임.
-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균형발전, 자치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인사·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등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여 특별법이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이런 과정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른 뒤, 2022년 7월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임.

## 2.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 기간동안 대구경북 각자의 중기예산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기계획과 시책사업들, 자치법규와 위원회 등 관련 사무조정 계획

- 대구경북 사무 조정계획은 주민투표가 가결된 이후, 통합지방정부 미래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임.
- 1년 남짓한 시간이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사무조정 설계에 집중한다면, 2022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3. 행정통합 관련 신청사 사업에 대한 대구시 입장

- 통합지방정부의 청사 위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으로, 상호 간 이해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 행정통합모델인 특별광역시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청사로는 인구와 면적규모 면에서 광역행정의 해결이 어려움.
- 통합된 특별광역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 경북청사가 필요하므로 대구 신청사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

#### 4. 행정통합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 완료시기 조정에 대한 생각

- 행정통합의 시기·목표 등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할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향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의지·목표를 표명한 현재가 행정통합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함.
- 다만, 시도지사의 의지로 통합 완료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시도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임.

#### 5.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각 지자체장 정치적 행보 오해 미연 방지 및 정책추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자치단체장 불출마 선언 필요

- 시도지사가 자리에 연연하여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행정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었을 것임. ‘대구경북의 밝은 미래’ 하나만 보고 우리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통합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시도지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행정통합의 밑알이 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각오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